

통일독일의 수도이전

이 상 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004년 12월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 이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들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현재 유력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행정부기능 일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통일독일의 행정기능 분담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통일 이후 베를린/본-법(Berlin/Bonn-Gesetz)에 따라 10개의 연방부처는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본에는 6개 부처가 남았다. 베를린으로 옮기는 연방부처들은 1999년 8월말까지 이전을 완료하였다. 이들 연방부처 외에 연방의회 상하원과 연방대통령실도 베를린으로 이전하였다. 독일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베를린과 본에 연방부처들이 분산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베를린으로의 완벽한 수도이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한 부처들은 제1청사를 베를린에, 그리고 제2청사는 본에 설치하였다. 본에 남은 부처들은 베를린에 제2청사를 두었다. 베를린과 본의 업무협조는 인터넷, 비디오회의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본과 베를린 간 셔틀항공편도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을 따라 이주하지 못한 900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주말에 본과 베를린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 연방공무원수에 비해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행정기능 분산이 정부차원의 비용측면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개인적인 가정생활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독일의 사례에서는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부처들이 새로운 청사들을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이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정부부처 기능의 분산과 관련된 비용 최소화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편집인: 페터 가이,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현백,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 110-742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1. 통일독일 사례의 의미

2004년 가을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싸고 극심한 국론분열양상을 보였던 우리의 모습은 15년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통일수도의 입지문제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었던 독일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독일의 경우 본(Bonn)과 베를린(Berlin)을 둘러싼 수도이전 논쟁은 결국 연방의회의 결정을 통해 종식되었다. 이러한 연방의회의 결정은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우리도 결국 독일처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 이후의 문제를 치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부기능의 이전 또는 일부부처의 이전과 같은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유력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행정부기능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로서 통일독일의 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은 통일 이후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면서 행정부처의 일부를 본에 잔류시켰다. 물론 독일의 사례는 사실상 행정부처 가운데 주요 부처를 포함해서 상당부분이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였고, 총리와 대통령의 관저가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등 완전한 수도이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부처만의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독일의 경우처럼 수도의 일부 기능을 분산시킨 경우는 말레이시아를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의회를 수도인 콰라룸푸르에 잔존시키는 대신 대부분의 부처와 연방재판소를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완전히 수도가 이전한 독일과는 달리 기존 수도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콰라룸푸르와 새로운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 간의 거리가 20km에 불과해 본과 베를린간의 직선거리가 500km에 가까운 독일과는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말레이시아의 사례는 세종로와 과천으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정부부처 입지 사례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사례는 독일과 같이 행정기능의 분산에 따른 업무비효율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는 일부 정부부처가 본에 남으면서 통일수도인 베를린과 과거 수도였던 본 간에 일부 연방정부기능을 분담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전에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논의과정에서 통일수도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통일에 대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통일이 될 경우 신행정수도와 북한지역 간의 수도기능 분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독일의 사례는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통일독일의 수도이전 사례에서 행정부의 본-베를린 분산배치가 갖는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2. 통일 독일의 수도이전 결정과 추진과정

1) 수도이전 결정과정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독으로 분단되면서

서 두 개의 수도를 갖게 되는 운명을 맞았다. 서독은 1949년 의회에서 본을 임시수도로 동독은 동베를린을 수도로 결정하였다. 본이 임시수도로 결정되었지만 당시 서독 국민들 간에는 향후 통일이 될 경우 베를린으로 환도(還都)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본은 서독국민들에게는 어디까지나 '임시수도'였던 것이다. 본이 서독의 수도가 된지 40년이 되던 1989년 베를린장벽이 붕괴되면서 통일수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동독주민들은 서독정부와 맺게 되는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1990)의 조건으로 연방수도를 베를린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한 반면, 서독주민들 간에는 베를린으로 환도하자는 주장과 본을 통일수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1990년 당시 설문조사에서 독일 국민의 51%가 베를린을, 23%가 본을 지지하였다. 베를린 지지세력의 70%가 동독국민이었고, 서독국민 가운데 베를린 지지세력은 46%였다(김인희 2003). 베를린으로의 환도를 주장하는 측은 베를린이 수도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점과 중부유럽의 중심지라는 지경학적 강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1949년 본을 임시수도로 결정할 당

시의 국민적 합의 등을 환도의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에 본을 통일수도로 하자는 측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도 독재적인 히틀러정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베를린으로의 환도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본-베를린 수도이전 논쟁은 1991년 6월 연방의회선거에서 337:320의 근소한 차이로 베를린이 통일수도로 결정되면서 종식되었다. 종전 이후 동서베를린으로 분단되었던 시련에도 불구하고 독일 역사에서 베를린이 차지했던 위상과 정체성 그리고 통일이라는 국가적 전환점이 이러한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회의 결정이 국민여론과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국민여론 다수가 통일수도로써 베를린을 선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베를린으로의 천도를 결정했다면, 그러한 결정이 실제로 집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수도이전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독일이 통일 이후 베를린으로 환도하게 된 것은

<표 1> 통일 독일의 수도 이전 경위

시 기	내 용
1990.8.31	동서독간 통일조약의 체결 - 통일독일의 수도로 베를린을 명시 - 정부 및 의회소재지는 통일이후 결정하기로 명시(본-베를린 수도이전 논쟁 본격화 계기)
1991.6.20	연방의회에서 베를린으로 수도이전 결의
1992.8.25	수도조약 체결 - 연방정부-베를린, 연방정부-브란덴부르크주 간의 협력계약
1994.5.6	베를린/본-법(Berlin/Bonn-Gesetz) 공포
1999.8.31	연방의회 및 정부 베를린으로 이전 완료

자료: 한국토지공사. 2004. 해외의 수도이전과 관련된 논쟁 및 시사점. p12.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수도라는 것이 역사적, 민족적, 정치경제적으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 수도이전 과정

수도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후 연방정부는 수도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1994년 4월에 확정된 베를린/본-법(Berlin/Bonn-Gesetz)에는 2000년까지 실행할 정부이전 계획이 명시되었다. 1999년까지 최종적으로 총리실과 홍보처를 포함한 10개 연방부처는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본에는 6개의 연방부처가 남게 되었다. 베를린/본-법에 따라 이전하거나 남는 부처들은 각각 본과 베를린에 부속사무소를 두도록 하였다. 즉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부처는 본에 제2청사를, 그리고 본에 남는 부처들은 베를린에 제2청사를 설치한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모든 부처가 본과 베를린에서 일부 기능이나마 유지하게 되었다. 베를린으로 이전한 부처는 총리실, 홍보처 외에 내무부, 법무부, 노동사회부, 재무부, 경제기술부, 건설교통부, 여성가족부, 외무부 등이며, 본에 남는 부처는 국방부, 교육연구부, 식품및농림부, 보건부, 환경부, 경제협력부 등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연방부처들은 행정부 내에서도 핵심적인 부처들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실상 베를린을 중심으로 정부기능이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부처들은 1992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 8월말까지 이전을 완료하였다. 한편 이들 연방행정부처 외에 연방의회 상하원과 연방대통령실이 각각 베를린으로 이전하였다. 1999년 9월 1일부터 연방하원과 연방정부는 베를린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수도이전과정을 통해 총 8,300개의 연방정부 일자리를 포함해 약 11,400개의 일자리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본의 급격한 경제위축을 막기 위해 베를린과 라인-마인지역에서 연방기능과 관련된 약 6,550개의 일자리가 본으로 이동하였다. 2002년 10월 기준으로 13,000명이 베를린의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본에서는 8,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3) 본과 베를린 간의 이전부처 업무활동

여기에서는 베를린으로 이전하거나 본에 남은 16개 연방부처 가운데 건설교통부, 환경부와 국방부의 사례를 통해 본과 베를린 간에 어떻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한 부처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제1청사를 베를린에, 제2청사는 본에 두었다. 베를린에 있는 제1청사에는 장관실, 총무국, 홍보부서와 내각 및 의회협의관련 부서, 주택 및 건설국 등이, 본의 제2청사에는 도로철도국, 수운국, 항공국 등이 배치되었다. 베를린의 제1청사에는 전체 일자리(1,650여 개)

<표 2> 연방정부기능의 본-베를린 분산배치

베를린	총리실, 홍보처, 내무부, 법무부, 노동사회부, 재무부, 경제기술부, 건설교통부, 가족여성부, 외무부	10개
본	국방부, 교육연구부, 식품및농림부, 보건부, 환경부, 경제협력부	6개

주: 1) 베를린과 본에 위치하는 부처들은 각각 본과 베를린에 제2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음
 2) 부처의 명칭은 필자가 편의상 축약하였음

의 약 33%(약 550개)가, 본의 제2청사에 67%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직원배분 비율은 2002년 기준 자료로서 2004년 현재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본의 건설교통부 청사는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연방건설청(BBR)이 사용하고 있다. 의회활동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주로 베를린에 머물고 있으며, 베를린과 본의 업무협조는 인터넷, 비디오회의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본에 남은 환경부의 경우, 제1청사에는 부처의 예산담당, 인사, 기타 내부행정관리 등 일반 행정관련 부서와 WA(수질, 쓰레기, 토양), IG(보건, 공해방지, 시설보호 및 교통, 화학물질안전), N(자연보호), RS(원자력시설의 안전, 방사선 보호, 핵처리 관련) 등 4개 부서가, 베를린의 제2청사에는 홍보부서와 내각 및 의회협의관련 부서 등 환경부의 수뇌부와 관련된 핵심 기능과 환경법관련 부서, 환경정책관련 주요 부서(환경정책의 경제적 문제관련 등)와 국제협력부서가 배치되어 있다. 베를린 제2청사에는 전체 일자리(742개)의 25%가, 본 제1청사에 75%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역시 2002년 기준 자료로서 현재에

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장관은 주로 베를린에 머물고 있고, 보통 2주에 한번 정도 본으로 이동해서 1-2일 정도 집무한다고 한다. 연방건설교통부와 마찬가지로 베를린과 본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비디오회의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본에 제1청사를 두고 있는 국방부의 경우 제1청사에는 군사전력국, 총무국, 군사행정국, 육·해·공군국 등이, 베를린 제2청사에는 홍보부서와 내각 및 의회협의관련 부서, 국방정책국, 무기국 등이 배치되어 있다. 본의 제1청사에는 2002년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3,300여 개)의 90%(약 3,000 개)가, 베를린 제2청사에는 10%가 배치되어 있는데, 국방부장관은 주로 베를린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베를린과 본의 업무협력은 타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국방부 인트라넷), 이메일, 비디오회의 등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현재 본과 베를린 간에는 정부업무와 관련한 정기항공노선도 운영되고 있는데, 2003년 10월부터는 Hapag-Lloyd-Express와 Deutsche BA가 이 노선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3> 본과 베를린 간 일자리 이동과 이주

구 분	이전한 일자리(개)	이주자수(명)
본에서 베를린으로 (연방정부, 연방상하원, 연방대통령)	약 11,400	약 7,500
베를린에서 본으로	약 4,350	약 1,900
라인-마인지역에서 본으로	약 2,200	약 1,200

주: 이 외에 본에 약 3,900개, 베를린에 약 2,450개 그리고 라인-마인지역에 약 1,000개의 기존 일자리가 그대로 남게 되었음.

자료: 독일 연방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자료, 2003. <http://www.bmvbw.de/cms-aussen-spezial/>

4) 수도이전에 따른 베를린의 청사건설과 본의 경제기능 보장

새로운 수도를 건설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는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기존 수도로 환도하는 형식으로 수도이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도이전에 따른 건설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다. 연방정부는 수도이전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새로운 청사를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베를린/본-법(Berlin/Bonn-Gesetz)에서는 수도이전비용의 상한선을 200억 마르크(약 12조 원, 1990년 기준)로 명시하였는데, 이전비용에는 청사건설비, 토지구입비, 주택공급비, 본에 대한 보상비 등이 포함되었다. 법에 정한 이전비용의 상한선은 대체로 지켜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일반건설공사에 약 61억 마르크(표 4 참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지역의 주택건설에 16억 마르크, 수도이전과 관련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0억 마르크가 각각 소요되었다. 이러한 투자금액 외에도 추가적으로 90억 마르크가 기타 인프라 건설에 투자되었다. 본에서 이주하는 직원들을 위해 9,100호의 주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베를린에 위치한 군사시설 이전지의 기숙사 개조, 베를린과 근교지역의 주택신축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였다. 베를린이 동서베를린으로 분단되었을 당시 서베를린지역에 주둔하였던 미군이 통일 이후 철수하면서 많은 군 숙소들이 남게 되었는데, 이러한 숙소들이 개보수를 통해 이주 직원들을 위한 주택으로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도가 베를린으로 이전함으로써 기존 수도였던 본의 도시경제에 대한 경제침체가 우려되었다. 1993년 본에서 발간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본 전체 일자리 가운데 약 1/3에 해당하는 45,000개가 수도기능

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2,600개의 일자리가 수도이전으로 인하여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김인희 2003). 그러나 이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베를린/본-법(Berlin/Bonn-Gesetz)에 따라 연방정부 부처 가운데 6개가 본에 남은 것 외에도 다수의 연방기관 및 연방에 속한 각종 단체와 협회들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본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이다. “본 보상에 관한 협정”에 따라 연방정부는 “행정기관 및 국제기구의 본 유치”, “본에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연방정부가 28억 마르크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약 24개의 연방기구와 행정기관들이 베를린과 라인-마인지역에서 본으로 이전을 하면서 약 6,5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또한 공기업과 민간기업들도 다수 본에 입주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부터는 10개의 국제연합(UN)관련 기관들도 본으로 이주하였다. 본은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의 대도시권과 도시경계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서 수도기능의 이전에 따른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 본은 이전의 연방수도에서 이제는 보다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연방기관의 건설비용

항 목	비용(마르크)
연방의회 의사당 개보수	6억
연방하원관련 신축	19억 2,800만
연방총리관저 신축	4억 6,500만
연방정부청사 개보수 또는 신축	29억 1,600만
연방상원 관련 개보수 또는 신축	2억

자료: 독일 연방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자료, 2008
<http://www.bmwbw.de/cms-aussen-spezial/>

3. 수도이전의 성과

독일의 수도이전은 통일이라는 국가적 전환기를 거쳐 오면서 당초 계획했던 시간과 비용의 범위 안에서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연방건설교통부장관 만프레드 스톨페(Manfred Stolpe)는 베를린/본-법(Berlin/Bonn-Gesetz) 10주년 기념일을 맞아 2004년 4월 25일 수도이전이 법에 따라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존평을 한바 있다. 이것은 수도이전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통일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이른바 통일비용으로 공식적으로 구 동독에 투입한 전체 비용이 약 1조 마르크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수도이전 비용은 200억 마르크(2%)에 불과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의 수도이전이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보된 도시로 이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수도가 된 베를린에서는 수도이전에 따른 과도한 인구집중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1990년 통일 당시 베를린의 인구는 346만 명이었는데, 수도이전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난 2004년 3월 현재 베를린의 인구는 339만 명으로 통일 당시보다도 오히려 감소하였다. 물론 이것은 도시의 광역화, 교외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4. 수도이전에 따른 문제점

독일의 수도이전이 성과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행정기능의 분산에 따른 정부와 의회 간 업무협력의 비효율성이다. 50년 동안 수도였던 본에 대한 배려측면에서 6개 정부부처가 본에 남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잔류기관에 따른 고용유지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에 본과 베를린을 오가야 하는 업무상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지출이 컸기 때문이다. 본에는 독일내 타 지역에 있던 연방기관들이 이전해온 것 외에도 도이체텔레콤(DT) 등 대기업들의 본사가 이전해옴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결국 시장이 정부의 빈자리를 메우게 된 것이다. 반면에 잔류한 연방부서들은 베를린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인터넷 등 첨단통신매체가 발달해서 과거와 같이 거리의 문제가 커다란 장애요인은 아니지만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의회와 장거리에 위치한 곳에 일부나마 정부부처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1년 5월 기준으로 900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주말에 본과 베를린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정부기능의 분산이 정부차원의 비용지출문제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개인적인 가정생활 측면에서도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행정기능 분산은 우리에게 분산에 따른 비용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미 본은 잔류한 정부부처보다는 민간기업들의 진출과 기타 공공기관의 입주를 통해 수도이전의 충격을 흡수해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방정부 부처들이 앞으로도 계속 본에 남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부처의 분산배치가 한시적으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부처의 배치는 정부업무의 효율성이

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부처 보다는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기업유치와 같은 다른 수

단을 통해서도 본의 경제 활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4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